

주요국제문제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8-35

2008. 11. 7



외교안보연구원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추이와 전망: 최근 치안 상황 변화와 미군 철수 논의를 중심으로

교수인남식

1. 논의의 배경

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

- 최근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미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이라크 문제였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여부 논의는 공화, 민주 양당 후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슈였음.
- 2006년 11월 미국 국회의원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했고 본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이 이라크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미 대선에서도 미국의 유권자들은 매년 900억 달러에 가까운 전비와 4,100명 이상의 미군 전사자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 진영 모두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로 자리 잡음.
- 전쟁 이후 줄곧 혼미했던 이라크 상황이 부시 행정부의 2007년 증파 전략(Surge strategy, "New way forward")에 의해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선거에서의 입장 논란이 가열됨.
 -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기존 병력 수준 유지 입장이었던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최근 이라크 내외 정세 변화와 추이
3.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전망
4. 고려사항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특히 미군 주둔의
재편은
미국 대선에서의
선거 공약 쟁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대 중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

16개월 내 이라크 완전 철군을 주장하며 상반된 노선을 견지
했음.

- 이라크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 정도 및 상황 인식 차이,
그리고 철군을 단행할 경우의 후폭풍에 대한 염려 등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9.11 이후 미국 대 중동정책의 분기점

-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특히 미군 주둔의 재편은 미국 대선에서의
선거 공약 쟁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대 중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대 중동정책의 양대 줄기가 ‘걸프 우선 노선(Gulf first
approach)’ 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선 노선(Israel-Palestine
peace process first approach)’ 이며 그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경우
걸프에 집중해 왔고, 걸프 우선 노선의 핵심이 바로 이라크 문제
였음.
 - 그러나 2007년 11월 아나폴리스 중동평화회의를 필두로 최근
대 중동정책에서 걸프 우선과 이-팔 평화협상 양쪽 모두를 강조
하는 균형적 무게 중심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쟁점은 향후 미국 대
중동정책의 향방을 예측하게 하는 가늠자가 됨.

2. 최근 이라크 내외 정세 변화와 추이

가. 안정 징후

(1) 미군 증파 전략(Surge Strategy)을 통한 안정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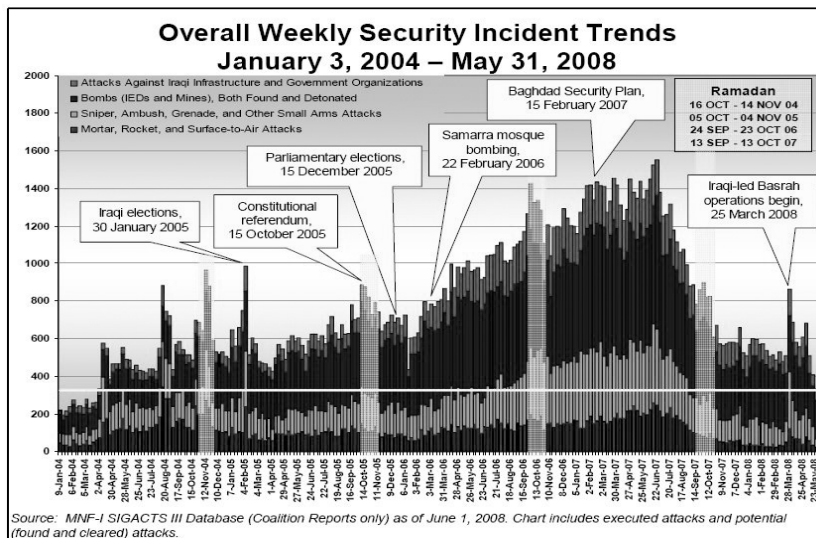
- 2007년 1월 10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신 이라크전략 “New
way forward”를 통해 미국은 치안(security), 재건(reconstruction)
및 화해(reconciliation) 구축을 기치로 공세적 안정화 작전을 전개함.
 - 이는 이라크 사태의 악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적시하고, 단계적
철군 및 이란, 시리아와의 타협을 주문했던 이라크 스터디 그룹

(Iraq Study Group)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역으로 증파를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음.

○ 5개 전투여단 17,500명의 지상군 병력을 바그다드에 추가 투입하여 무끄따다 알 사드르(Muqgtada al Sadr)의 마흐디(Mahdi) 민병대를 견제함으로써 내전 상태의 바그다드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4,000명의 해병대를 알 안바르 주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오랜 순니파 무장 투쟁 거점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함.

- 특히 이라크 중서부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이라크 알 카에다(AQI) 조직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더불어 이란의 후원을 받는 이라크 내 제 정파를 견제하는 효과를 획득함.

[그림 1] 주별 치안 사건 사고 발생의 흐름



미군 증파 전략 (Surge Strategy)은 내전 상태의 바그다드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오랜 순니파 무장 투쟁 거점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

○ 이 과정에서 이라크 보안군(Iraq Security Forces, ISF)이 미군의 편제 속에 병합, 배속되어 작전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미군이 가진 치안유지 및 재건활동의 노하우를 일정부분 전수할 수 있었음.

(2) 3대 정치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지방정부의 영향력 강화

○ 2008년 2월 13일, “지방 권력에 관한 법률”, “앰네스티 법” 및 “예산 세입 세출 관련 법안” 등 3대 이라크 정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교차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반면,
이라크 연방
중앙정부는
무능과 혼란상을
지속적으로 노정하며
단일 연방국가로서의
구심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정됨에 따라 각 정파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냄.

- “지방 권력에 관한 법률”은 다수파인 시아파의 정치적 지분과 영향력 확대를 보장함.

- “앰네스티 법”은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권력의 핵심인 바트당원으로 활동하다 이라크 전쟁 이후 체포 수감된 순니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적시하는 법률로서 순니파 정치지도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킴.

- “예산 세입 세출 관련 법안”에서는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의 교부 비율을 17%로 책정함으로써, 적정 배분 비율인 13%를 상회함에 따라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이 발생함.

○ 특히 2007년 말로 예정되었던 키르쿠크 영유권 관련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쿠르드와 순니파 간 고토 회복(irredentism) 논쟁을 둘러싼 분쟁 촉발 가능성이 낮아짐.

- 쿠르드 자치정부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이라크 중북부 타미주의 유전개발권 관련 논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순니 아랍 쿠르드 간 극단적 대결 구도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는 현존하는 정파 간 대립 갈등 구도를 폭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나. 불안정 징후

(1) 중앙정부의 무능과 혼란 지속

○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반면, 누리 알 말리키(Nuri al Maliki)가 이끄는 이라크 연방 중앙정부는 무능과 혼란상을 지속적으로 노정하며 단일 연방국가로서의 구심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이라크 석유법(hydrocarbon law)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함에 따라, 각 정파별, 지방별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음.

- 석유법의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이 종파, 종족 단위로 진행 중이며 현재 2008년 말까지 최종 상정 및 의회심의를 목표로하고 있으나 산적한 장애물이 많은 상황임.
- 석유법의 경우 단순히 국가 차원의 유전 개발 및 수립 관리, 배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라크 연방의 운영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조정과 중재를 도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연방 해체의 원심력 심화 요인 상존

- 미군의 증파 전략에 힘입어 이라크 보안군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순니-시아-쿠르드 및 과거 정치세력 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 해체의 원심력 심화 요인이 상존함.
- 중부와 남부를 거점으로 하는 집권 시아파의 경우 남부 최대 유전 지대인 바스라를 점유하고 있어 기대 수입이 막대한바, 향후 독립 지향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함.
 - 현재로서는 미국의 지원을 통하여 연방제의 틀 하에서 ‘국가 건설(state building)’ 과정을 시아파가 이끌고 있으나, 분쟁 요인이 심화될 경우 굳이 연방의 틀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음.
 - 실제로 바스라를 거점으로 하는 시아파 파딜라(Fadilah) 당과 이 당의 중심세력인 석유노동조합 바스라 유니온은 바스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라크 남부 석유를 가지고 독립된 시아파 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특히 무끄타다 알 사드르가 이끌고 있는 마흐디 민병대 중심의 친이란 과격 시아파단체의 경우 기존 정치질서를 붕괴시키고 시아파 전통주의 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집권 시아파의 권력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쿠르드의 경우 연방정부의 대통령직을 확보하여 이라크 연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함.

여전히
순니-시아-쿠르드 및
과거 정치세력 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 해체의
원심력 심화
요인이 상존...

- 쿠르드 자치정부는 시아파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국가 운영, 특히 석유 수입 배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음.
- 특히 2007년 10월 독자적인 석유·가스 투자법을 제정 발효하여 연방정부의 간섭과 승인권을 일체 거부하고 쿠르드 3개 주(아르빌, 술라이마니아, 도후크)에서의 탐사 및 채굴권에 대한 독자적 관리를 선언함.
- 터키, 이란,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내 강국으로 둘러싸인 쿠르드의 경우 선부른 독립시도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 온바, 향후 독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자신들의 지분을 높이려 하고 있음.
- 순니파의 경우, 다수 인구를 점유하는 시아파 및 상대적으로 폭 넓은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는 쿠르드에 비해 입지가 약한 상황 이기에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입지 강화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근 순니 아랍 왕정과의 연대를 통한 대 연방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을 애매하게 기술해 놓은 이라크 연방 헌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등 순니파의 반 연방 정서 확산 가능성이 상존함.

(3) 반미 감정의 확산과 미군 주둔 관련 부정적 인식 증대

쿠르드 자치정부는 연방정부의 국가 운영, 특히 석유 수입 배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지분·영향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순리파는 법적 권리·입지 강화를 요구...

-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의 폭정을 종식시켰고 부시 행정부의 증파 전략을 통해 혼돈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주둔에 관한 이라크 내 전반적인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외국 군대가 특정 국가의 정권을 정복시켰을 경우, 수주일 이내에 반드시 철수해야 '해방군(liberation army)'의 지위를 획득하고 영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여하한 이유로든 주둔을 지속할 경우 현지인들에게 '점령군(occupation army)'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전쟁 직후 이라크의 행정책임은 맡은 폴 브레머(Paul Bremer) 등

주요 인사들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의 경험례를 바탕으로 미군의 장기 주둔 하에 이라크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믿었던바, 이 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인식의 괴리(cognitive dissonance)가 생겨나게 됨.

- 십자군 전쟁부터 양차대전 후 식민지 재편 과정으로 이어지는 동안, 아랍 이슬람권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을 '제국주의적 침탈 세력'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을 갖고 있음.
 - 전후 모범 재건 사례였던 서독의 경우 연합군은 나치 청산과 정치체제 개편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독일 내부의 자율적 결정을 시종일관 존중하였고, 일본의 경우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는 붕괴했으나 여전히 쇼와 천황이라는 구심점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패전의 현실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치적 안정성이 존재했음.
 - 이라크의 경우 종파, 종족 간의 갈등과 증오가 전혀 용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착근 시도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개입과 지속적 주둔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됨.
- 특히 1차 걸프전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반 사담 후세인 종파인 이라크 시아파를 설득하여 반 사담 봉기를 일으킬 경우 시아 정권 수립을 약속했었으나, 종전 이후 이 약속을 어기고 사담을 권좌에 유지시키기에 따라 사담의 유혈 보복 참극이 지속되었음.
- 이라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경우 미국을 사담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일시적으로 협력한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됨.
 - 실제로 전쟁이 종식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이라크인들은 미국을 해방군(148%)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점령군(66.6%)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06년 말 발표된 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Baker-Hamilton Report)는 이라크 국민의 61%가 미군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현재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종파, 종족 간의
갈등과 증오가
용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착근 시도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개입과
지속적 주둔에
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

- 미군의 지속 주둔에 관한 이라크 대중의 비판이 점증함에 따라 이라크 정치지도자들 역시 미군의 철군 일정 확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이라크 안보협정(security pact) 협상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음.

3.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전망

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목표

(1) 단일 연방국가 유지

집권 시아파의
안정적 통치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시아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화하는 데
진력하고,
쿠르드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개입...

- 각 정파 간의 갈등 기조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연방 유지의 구심력보다는 해체수순의 원심력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 중동정책 기조에서 볼 때 이라크는 반드시 단일 연방국가로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일단 집권 시아파의 안정적 통치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시아파 내부의 갈등(ISCI/이슬람 다와당 연합과 사드르 계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음.
 - 쿠르드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개입하고 있음. 쿠르드가 독립을 선언할 경우 인근 터키와 이란, 시리아가 자동 개입하여 이라크가 다시 전장화(戰場化) 될 가능성이 크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임.
 -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석유개발권 소유 문제가 지속되자 미국은 2007년 9월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한이 우선함을 천명함.

(2) 이라크발 테러리즘 근절

- 반테러·비확산(Counter-terrorism, Non-proliferation)을 주요 대외정책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의 혼란을 틈타 서부 지역 중심으로 발호하기 시작한 순니파 무장투쟁단체와 이라크 알 카에다 등 외부 유입 국제테러리즘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진력해 왔음.

- 순니파 무장투쟁단체(Sunni insurgency)는 중파 전략 이후 ‘아랍 각성 운동(Sahwah, Arab Awakening)’으로 변환하여 미국 및 이라크 보안군과 협조적인 관계로 극적 전환되었고 이들은 현재 순니파 거점 지역인 알 안바르 주를 중심으로 이라크 알 카에다 세력과 싸우고 있음.

(3) 이라크 민주주의 확립 및 확산을 통한 중동 지역 내 안정 구축

- 미국은 이라크를 민주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동 전역의 민주화 확산(spillover)을 추구해 왔으나 이라크 내의 치안 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음.
 - 2004년 6월부터 확대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을 통해 중동 전역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선거를 통해 반미·반서구 노선을 채택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약진 하였음.
 - 결국 미국은 중동 내 민주주의 이식 구상을 일단 보류하고 친미·친서구 정권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matured democracy)으로 나아가고 있음.
- 현재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주의 구축 방향을 놓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top down)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정치체제 단위 간의 합의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향(bottom up)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음.
 - 본디 연방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일반화되고, 여기에 최근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주의 구축 방향을 놓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top down)으로 갈 것인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bottom up)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

(4) 이란의 영향력 확산 방지

- 시아파 종주국이자 이슬람 혁명노선의 수출을 국시로 설정하고 있는 이란은 최근 중동 정치지형 변화의 최대 수혜자임.
 - 고전적 경쟁관계였던 아랍민족주의 공화정의 상징인 사담 후세인의 부재와, 순니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의 실각은 이란으로 하여금 역내 최대 패권국가로 급부상하게 하는 호재였음.
- 이란-이라크-바레인-사우디 알하싸 지방으로 이어지는 “시아 편자

오바마 당선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표명해 왔고,
이에 대하여
이라크 정부 인사들도
찬성하고 있는
입장...

지대(Shiite horse-shoe area)”는 최대 유전지대인 걸프 지역을 시아파 밀집지역이 포위하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 회랑(Shiite corridor)” 지대는 곧바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세력과 연결되며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위협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라크 집권 시아파 내부의 갈등 구도에서 사드르 계열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이란과의 연대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이란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라크 내 온건 시아파의 지속적 집권을 희구하고 있음.

나. 2009년 이후 미군의 이라크 주둔 관련 전망

- 미군의 이라크 주둔 관련 의견을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음. 오바마 당선자는 철군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6개월 이내에 주요 전투부대 철군을 완료할 것임을 천명함.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의 경우 현재 이라크 주둔 병력의 수준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할 것을 밝혀 왔음.

(1) 무조건적, 전면적 철수(Unconditional, near-total reduction of U.S. military commitment) 시나리오

- 오바마 당선자의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표명해 왔고, 이에 대하여 이라크 정부 인사들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임.
 -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은 현재 잘못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하는 무제한적인 군비 소요와 인적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반테러전이라는 명분상 현재 탈레반이 발호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선택,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
 -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3만 2천 명 외에 약 1만여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걸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항공모 에이브러햄 링컨 호를 아라비아 해로 이동 배치시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기 시작함.
- 이라크 주둔을 통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때, 철군으로 방향이

설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확정된 시간 계획을 제시하고 2011년까지 철군 완료
- 걸프 지역 군사력 배치 강화를 통하여 유사시 이라크 개입 준비 태세 확립
- 중동 지역 내 동맹 시스템 개편 및 강화
- 민간 차원에서의 치안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소한의 연계 유지

○ 그러나 미군의 공백 시 이라크 연방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란의 영향력 확대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면적 철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임.

- 오바마 당선자는 이라크에서의 전면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라크 대사관 방호 병력 규모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라크 내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 규모는 향후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함.

(2) 현 병력 수준 유지 및 지속적 주둔(Constant commitment) 시나리오

○ 오바마의 당선으로 현 병력 수준 유지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으나 상황은 가변적임.

- 이라크 시아 행정부는 조기 철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세력은 미군의 부재로 인한 이라크 치안 붕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매케인 후보 진영에서 주장해 온바, 비록 증파 전략에 의해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안정은 미군이 라는 지지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평가에 근거함.

- 따라서 이라크 정규군의 능력이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향상되고 검증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를 미국의 맹방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함.

○ 다만, 부시 대통령이 1차적으로 8,000명의 병력 감축을 선언했고, 내년까지 증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천명함에 따라, 2007년 1월 이전의 병력 수준인 13만여 명 수준의 미군 주둔을 추진하자는 주장임.

이라크 시아
 행정부는
 조기 철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세력은
 미군의 부재로 인한
 이라크 치안
 붕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요구...

이라크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미군 감편 배치를
추진하고,
이들 미군은
이라크 정규
치안군에 대한
지원과 훈련 등의
임무에 치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 주둔 및 병력 수준 유지 방안을 계속 시행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역시 이라크 내부의 반미 정서, 미군 철수 주장 및 중동 역내 국가들의 반대임.
 - 말리키 정부는 2011년까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청해 놓고 있고, 인근 사우디 왕실 역시 미군의 계속 주둔을 직접적으로 비판함.
 - 2008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483호의 치안 재건 지원 다국적군 파병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함.

(3)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수준에서의 감편 체제 주둔 유지(Reduced, conditional commitment) 방안

- 오바마와 매케인의 입장을 절충하는 수준에서의 방안으로 상황 변화를 독립 변수로 하여 이에 연동되는 감편 체제 또는 증편 체제 주둔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편임.
- 이 경우는 연방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분권화된 정치 체제가 안정적으로 착근되어 가는 다음 상황을 전제로 하여 미군의 신축성 있는 배치 운용을 목표로 함.
 - 석유법의 확정 및 안정적 시행
 - 지방선거의 시행을 통한 지방 분권 제도의 안정화
 - 연방 정규군의 중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이라크 치안군의 능력 향상
- 이라크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미군 감편 배치를 추진하고, 이들 미군은 직접적 치안 재건 활동 임무를 수입하지 않고 이라크 정규 치안군에 대한 지원과 훈련 등의 임무에 치중하도록 하는 방안임.
 - 그럼에도 유사시 즉각 실효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

다. 향후 미군 주둔 전망

- 향후 미군 주둔의 3가지 방안이 각각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정책 목표	전면 철군 안	지속적 개입 안	감축/조건적 개입 안
단일 연방국가 유지	보통	긍정적	긍정적
테러리즘 근절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역내 안정	부정적	부정적	보통
이란 영향력 견제	부정적	긍정적	보통
반미 감정 해소	긍정적	부정적	보통

- 사실상 단순히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목표라는 차원에서는 미군의 지속적 개입, 즉 매케인의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전비, 미군 누적 사상자 수의 증가에 대한 미국 내부의 여론 및 선거 변수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악화라는 외부적 변수로 인해 지속적 개입 및 병력 수준 유지 또는 증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임.
- 반면에 전면 철군의 경우 미국 내부의 여론을 수용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라크 내 미국의 정책 목표 차원에서는 최악의 조합이 배태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감축 기조를 선언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조건적으로 개입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3번째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임.
- 기존 이라크 주둔 사령관이었던 퍼트레이어스(Petraeus) 장군이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Centcom) 사령관으로 영전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파악됨.

일단 감축 기조를 선언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조건적으로 개입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라. 미-이라크 안보 협약(Security Pact)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이라크 간 안보 협약 관련 알려진 내용으로는,
 -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미군 및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이라크 측이 요구함(단 치안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재검토 가능).
 - 2009년 6월 말까지 주요 도심지에서 미군 캠프를 철수함.
 - 부시 행정부는 상기 시한 명시화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화하였으며, 다만 치안 상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2008년 말, 유엔이 결의한 다국적군 주둔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 “주둔군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인바, 미국이 제시한 초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와 격론을 벌이며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2만 9천 피트(8,230미터) 이하 영공통제권
 - 일방적 군사작전 실행권
 - 이라크 주민 체포 구금권(예방적 구금권)
 - 50여 개 영구 군 기지 사용권
 - 미군 및 민간업자 면책 특권
- 미군의 현 수준 병력 유지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높지 않음. 대신 양자 입장의 점점 수준에서 적절한 감편 및 조건적 재배치를 통해 미국은 이라크 지방정부별로(segmentation base) 상황에 조응하는 치안 재건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할 것이며 지방 재건 사업(PRT, RRT)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감편된 미군의 노출을 최소화하되 유사시를 대비,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투사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은
이라크
지방정부별로
상황에 조응하는
치안 재건
프로젝트를 시행,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재건 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4. 고려사항

가. 자이툰 부대 철군 이후의 대 이라크 기여 방안 모색

- 2008년 말 이라크 평화 재건을 위한 유엔의 다국적군 파견 결의안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주둔했던 자이툰 부대의 귀국이 확정되었음.
 - 지금까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자이툰 부대의 기여가 적지 않았던 바, 자이툰 철군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온 숙영지 100만 평 540여 동의 건물 및 첨단 시설 인프라를 이용, "코리아 시티" 건설 등을 통해 한국의 민간 기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이라크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네트워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나. 이라크 지원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 우리 정부는 마드리드 이라크 재건회의 이후 2억 6천만 달러의 이라크 무상원조 지원을 시행하였고, 제 2차 이라크 재건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향후 이라크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네트워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유엔 및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 IRFFI)' 기여분을 늘리는 방안 모색
 -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ICI)' 및 '이라크 핵심그룹(Iraq Core Group)'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 쿠르드 지역의 재건 및 자치정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아르빌 지방재건팀(Regional Reconstruction Team, RRT)의 사례는 제3국과 공동으로 재건 사업을 수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다. 이라크 연방 및 지방정부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 이라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잡다기한 경쟁적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연방정부 및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입체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 석유 개발권 관련 이라크 연방정부와의 갈등 사례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인사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라. 포괄적 중동정세변화 대응 방안 마련

- 중동의 정세는 유가 변동과 직결되며, 테러리즘의 확산 및 대량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를 통한
중동-이슬람권
연구 수월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

- 살상무기 이전 등과 같은 안보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란의 부상, 이스라엘의 강경화,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의 약진 등 중동 전역에 걸친 정세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를 통한 중동-이슬람권 연구 수월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임.

2008. 10. 8

토론: 연구부장 최강
교수 박흥규
심의관 김종근
편집: 연구원 김예원

外交安保構想의産室
先進精銳 外交官의産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